

프랑스 FRANCE

프랑스, 기업 내 여성임원 40% 할당제 법안 하원 통과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지난 5월 12일, 프랑스 하원 의회는 2030년까지 기업 내 의사결정직에 여성 비율 40%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정당에 상관없이 61명 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본 법안은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설정하고 각종 입법 및 정책 이행을 추진해 왔다.
- 이번 법안은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고위 의사결정직 내 여성 임원 비율을 2027년까지 최소 30%, 2030년까지 40%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법안 하원 통과를 두고 엘리자베스 모레노(Elisabeth Moreno) 양성평등정책장관(Gender Equality Minister)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사실 프랑스는 이미 여성임원 할당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프랑스는 2017년부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2020년까지 임원직의 최소 40%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Copé-Zimmermann law)을 시행한 바 있다. 입법 당시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그 결과 원안에 비해 적용내용과 구속력이 다소 축소되어 완성된 법이었다. 당시 여성임원 할당제 법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진적 도입안을 채택했는데, 2011년 제정 당시 여성이 임원 명단에 한명도 없는 경우 다음 총회까지는 한명 임명할 것, 2014년 기준 이사급(director) 여성임원 비율이 최소 20%이상일것, 2017년 1월 부터는 여성임원 비율 최소 40%를 달성하고 2020년 1월 부터는 5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2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확대 적용했다.

참고자료

- Fr24 News (2021.05.15), "France unanimously votes gender quotas for executive leadership", <https://www.fr24news.com/a/2021/05/france-unanimously-votes-gender-quotas-for-executive-leadership-fr.html> (접속일: 2021.07.25.)
- The 30% Club (2020.11.11), "Six asset managers launch the 30% Club Investor Group in France," <https://30percentclub.org/press-releases/view/six-asset-managers-launch-the-30-club-investor-group-in-france> (접속일자: 2021.07.25.)
- The Guardian (2013.12.23), "French firms warned of fines for not complying with gender equality la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dec/23/french-firms-fine-gender-equality-laws> (접속일: 2021.07.25.)

위와 같이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법을 실시한 결과, 프랑스 주가지수(CAC40) 상장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009년 10%에서 2019년 45%가량으로 크게 상승했고, 그 결과 프랑스는 아이슬란드(46%)에 다음으로 세계에서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여성임원 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사회나 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고위임원직 내 여성 비율은 아직 낮고 약 22%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모레노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여성임원 할당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숙히 고착화된 성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의회 내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Delegation for Women's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마리-피에르 리생(Marie-Pierre Rixain) 의장은 법안 통과 후 감격하면서도, 아직 프랑스 사회에 유리천장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상, 하원에는 1999년 조직된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관련 입법안을 검토 및 발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 후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여성임원 할당제 연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정부가 기업의 선택권에 간섭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안도 이전처럼 벌금 조항이 명시되었는데, 2030년 발효 이후 2년 내 여성임원 비율 40%를 채우지 못하면 총 임금계산서(wage bill)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법안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일부 기업에는 수천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기업 내 여성임원 할당제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은행(BpiFrance)에서 55세 이상 여성도 본인 은행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갖고 임금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배우자가 아닌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한부모 가정의 보육서비스 지원, 임신부 근로여성의 자택 또는 원격 근무 지원도 포함되었다.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6개 투자그룹이 모여 고위급 경영직에서의 남녀 균형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30% Club France Investor Group'를 발족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본래 2011년 영국에서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대상 투자기업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조직된 네트워크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조직된 그룹은 프랑스 시가총액 상위 120개 기업(SBF 120) 내 고위 임원직에서 여성 리더 비율을 2025년까지 최소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아닌 재계에서 자발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여성대표성 증대를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그룹들은 프랑스 내 기업들이 경영진 구성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노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RFI (2021.05.13),
"French MPs approve quotas for more women in corporate management",
<https://www.rfi.fr/en/france/20210513-french-mps-approve-quotas-for-more-women-in-corporate-management>
(접속일: 2021.07.25.)

- Soulier-Avocats (2016.11.29.),
"Upd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designed to increase the presence of women in the boardrooms of large French companies",
<https://www.soulier-avocats.com/en/update-on-the-application-of-the-rules-designed-to-increase-the-presence-of-women-in-the-boardrooms-of-large-french-companies/>
(접속일: 2021.07.25.)

올해 하원을 통과한 기업 내 의사결정직 여성임원 40% 할당제 법안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여성임원 할당제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이전 법을 이행하면서 실제로 프랑스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도 향후 의사결정직 내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해 볼 만 하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임신 및 출산 선택권 정책 현황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인력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2021년 7월 말부터 경구 피임약이 출시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프로제스토젠 경구 피임약(progestogen-only contraceptive pill)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영국의 난자 냉동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영국 하원 보건복지위원회(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가 2021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국의 연도별 신생아 사망률과 출산 서비스 현황을 되짚어 본다. 이후 변화된 경구 피임약 구매 정책의 내용과 이 결정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국의 현행 난자 냉동 정책을 검토하며 임신과 출산 선택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영국 정부, 출산 서비스 개선에 246만 파운드 투입

-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7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 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246만 파운드(약 38억 8천만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예산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산부인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영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1980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000명당 12명이었던 신생아 사망률이 2000년엔 1,000명당 5.6명으로 53% 감소했고, 2019년엔 1,000명당 3.7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망한 신생아 숫자는 총 2,39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영국 통계청은 1세 이하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 사망 통계에 포함한다.
-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신생아 사망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maternal and infant mortality)'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신생아 1,000명당 사망률이 2.1명으로 영국보다 1.6명 더 적다. 영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생아 사망 건수를 천 명대로 낮춰야 한다.


참고자료

- GOV.UK(2021.07.04.), "Government pledges £2.45 million to improve childbirth car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ledges-245-million-to-improve-childbirth-care> (접속일: 2021.07.25.)
- The Royal College of Midwives(2020.11.16.), "Fears for maternity as staffing shortages hit safety and morale say RCM", <https://www.rcm.org.uk/media-releases/2020/november/fears-for-maternity-as-staffing-shortages-hit-safety-and-morale-says-rcm/> (접속일: 2021.07.25.)
-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2021.06.29.), "The safety of maternity services in England",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6578/documents/71418/default/> (접속일: 2021.07.25.)
- GOV.UK (2021.07.08.), "First progestogen-only contraceptive pills to be available to purchase from pharmac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first-progesterone-only-contraceptive-pills-to-be-available-to-purchase-from-pharmacies> (접속일: 2021.07.25.)

- 영국 의회는 NHS의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이 영국의 신생아 사망률을 현 수준에서 정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영국 하원 보건복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6월 29일 발표한 보고서 ‘영국의 출산 서비스 안전(The safety of maternity services in England)’에 따르면, 영국왕립조산사학회(Royal College of Midwives)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산사 10명 중 8명(전체 응답자의 83%)에 교대 근무하는 의료진과 각 산부인과 부서에 순환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해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영국 조산사 1,400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4월 21일 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잉글랜드에만 조산사 23,66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조산사 1,932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49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조산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산모들이 출산할 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마취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진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연간 예산을 2억~3억5천만 파운드(약 3,181억~5,566억 원)로 늘려 산부인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영국에서 처방전 없이 프로제스토젠 경구 피임약 구매 가능
- 영국에서 7월 말부터 프로제스토젠 경구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경구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영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여성들이 피임과 임신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식약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는 7월 8일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프로제스토젠 경구 피임약은 영국에서 ‘미니필(mini pills)’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영국에 사는 여성들은 약국에서 약사와 간단한 상담을 한 뒤 한 달 치 피임약을 약 7.50 파운드(약 12,000원)에 살 수 있다. 구매 가능한 브랜드는 로비마(Lovima)와 하나(Hana) 두 가지다. 프로제스토젠 피임약에는 데스게소트렐(desogestrel)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MHRA는 이 성분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 MHRA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올해 2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MHRA에 따르면, 공청회를 통해 총 494개 의견이 접수됐고, 전체 접수된 의견 중 80%가 프로제스토젠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사는 내용에 찬성했다.
- 영국왕립산부인과협회(RCOG,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의 에드워드 모리스 회장은 “MHRA의 결정은 여성들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 앞으로 여성들이 피임약을 살 때 불필요한 장애물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인 여성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힘들어했고,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엄마와 아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한다”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 The Guardian (2021.7.8.)
“Contraceptive ‘mini pills’ to be offered over the counter in UK”,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jul/08/contraceptive-pill-will-be-available-over-the-counter-for-the-first-time>
(접속일: 2021.07.25.)
-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20.9.) “Egg freezing in the UK”,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gg-freezing-in-the-UK.pdf>
(접속일: 2021.7.25.)
-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2020.2.27.)
“UK law on storage limit for egg freezing is too restrictive, say RCOG and BFS”,
<https://www.rcog.org.uk/en/news/uk-law-on-storage-limit-for-egg-freezing-is-too-restrictive/>
(접속일: 2021.7.25.)
- OECD.Stat(2021.07.02.),
“Health Status: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6>
(접속일: 2021.07.25.)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02.24.),
“Child and infant mortality in England and Wales: 20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deaths/bulletins/childhoodinfantandperinatalmortalityinenglandandwales/2019>
(접속일: 2021.07.25.)

난자 냉동 기간 10년 제한, 연장 목소리

- 현재 영국에서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부인과학회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보관된 난자는 관련 법인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 1990(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료가 일시 중단된 불임 치료 환자들만 대상으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해 임신을 미루기 위해 난자를 냉동한 여성들은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2020년 9월 '영국의 난자 냉동(Egg freezing in the U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난자 냉동 보관 기간 연장이 여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나이가 더 어릴 때 건강한 난자를 냉동해 이후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남성의 생식 능력은 노화에 의한 영향을 덜 받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생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 냉동 기간을 늘리면 여성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영국왕립산부인과협회도 2020년 2월 27일 '영국의 난자 냉동 보관 기간 법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리화(vitrification)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난자 냉동 기술이 개발돼 앞으로 난자를 무기한 냉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10년 제한 정책 때문에 여성들이 난자가 가장 건강한 20대에 냉동하는 대신 난자의 질이 다소 떨어진 30대 때 냉동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  영국 의회가 2021년 6월, NHS 산부인과 인력 부족 현상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한 뒤 영국 정부는 관련 인력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 246만 파운드를 투입했다. 2021년 7월 말부터 영국에서 여성들이 처방전 없이 경구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성의 피임과 임신 선택권을 강화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10년으로 제한된 난자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아이 돌봄 정책 개편

김 양 숙 토론토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Fellow)

캐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아이 돌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2021년 7월 8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아이 돌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캐나다의 만성적 아이 돌봄 서비스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일자리를 창조하여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Prime Minister of Canada, 2021). 총리는 또한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나섬으로써 어느 지역에 살던 간에 아동들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그간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 동안 망가진 캐나다 경제 회복 계획의 방향성으로서 페미니스트적 회복(feminist recovery)이라는 구호를 제시해 왔는데, 아이 돌봄 영역에의 투자는 캐나다 정부가 페미니스트적 회복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캐나다는 지난해 3월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이후 근 1년간 봉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었다. 그러나 4월을 지나 5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여 7월 2주 차에 들어서는 일일 확진자가 3백 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시민권이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총인구)의 약 70%가량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50%가 2차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온타리오(Ontario)주의 경우 애초 예상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빨리 3단계로 진입, 7월 중순 현재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고 체육시설 등이 다시 오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전역에서 9월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 즈음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도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가 빠르게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경제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아이돌봄 제도 개편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도 캐나다의 학계와 시민 사회는 돌봄 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단적으로 캐나다 타주들에 비해 탄탄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데이케어 일일 비용이 평균 8달러에 머물고 있는 퀘벡주의 경우 여성들의 평균 고용률이 캐나다 평균보다 5%p 높다(The Tyee 2020). 현 캐나다의 집권 여당(NDP)은 지난 수년간 아이 돌봄 제도를 개혁할 것을 약속해 왔지만 돌봄이라는 의제는 늘 항상 다른 의제들에 비해 우선 다루이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퀘벡을 제외한 타주들의 열악한 아이 돌봄 인프라는 팬데믹 동안 캐나다 여성들에게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라는 결과로 돌아왔는데, 과거 캐나다의 경기 불황 시기에는 주로 남성들이 대량 실업의 고통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지난 1년간의 팬데믹은 여성들에게 직격타를 날렸고 잘 갖춰지지 않은 돌봄영역은 여성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희생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경이 봉쇄되고 락다운이 시작된 2020년 3월 여성의 고용률은 바로 전 달인 2월에 비해 5.3% 하락했지만 남성의 고용률은

참고자료

- CBC(2021.07.08.), "Federal, B.C. government's reach deal on child-care funding",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trudeau-horgan-bc-childcare-funding-announcement-1.6095101> (접속일: 2021.07.19)
- CBC(2021.07.19.), "What \$10 a day in child-care costs could mean for parents if N.B. sings up for federal plan", <https://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reduction-child-care-cost-new-brunswick-1.6108311> (접속일: 2021.07.19)
- LMIC(Labour Market Information Council, 2021), "Women in Recessions: What Makes Covid-19 Different?", <https://lmic-cimt.ca/publications-all/lmi-insight-report-no-39/> (접속일: 2021.07.19)
- Prime Minister of Canada (2021.07.08.), "Canada announces historic first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greement",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1/07/08/canada-announces-historic-first-early-learning-and-child-care> (접속일: 2021.07.19)
- The Tyee(2020.1.24.), "These policies could help end single-parent poverty in BC", <https://thetyee.ca/News/2020/01/24/Policies-End-Single-Parent-Poverty-BC/>

3.2% 하락하였으며,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의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만큼 저소득계층 여성의 피해는 더욱 커서 작년 3월 저소득계층 여성의 고용률은 무려 14% 하락했다(LMCI, 2021).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돌봄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쉬세션(she-session: 팬데믹 불황의 젠더적 함의를 인식하는 용어)으로 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은 올해 4월 향후 5년간 데이케어 개혁을 위한 270억2천억 캐나다 달러(약 24조 4,813억원)의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 연방의회에서 이를 빠르게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2022년까지 아이 돌봄 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2026까지 캐나다 전국적으로 일 10달러의 데이케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접속일: 2021.07.19)

- The Coast(2021.07.13.), "Trudeau calls NS child care funding key to 'a feminist recovery' from COVID, Read more at", <https://www.thecoast.ca/halifax/trudeau-calls-n-child-care-funding-key-to-a-feminist-recovery-from-covid/> Content?oid=26780018 (접속일: 2021.07.19)

비록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 돌봄 예산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책정은 되었지만, 캐나다가 전국 규모의 아이 돌봄 개혁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트뤼도 수상은 캐나다 전 주를 순방하고 있으며, 두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노바스코시아가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다. 지난 7월 8일 제일 캐나다 주들 중 처음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가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30억2천만 캐나다 달러(약 2조 8,801억원)의 예산을 향후 5년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투입하여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개선하고 유연하며 포용적인 아이 돌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게 된다. 이 협약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향후 5년간 6세 이하의 아동을 데이케어를 보내는데 부모들의 부담을 평균 일 10달러로 낮추자는 목표에 동의했다. 또한 이 협약으로 2022년 말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6세 이하 아동 부모들의 아이 돌봄 평균 지출 비용이 50%로 줄어든 것이며, 향후 5년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약 30,000개(7년 후에는 40,000개)의 아이 돌봄 기관이 생겨날 것이다. 이 신생 돌봄 기관들은 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7월 8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의 협약을 발표하면서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는 캐나다 사회에서 고질적인 것이었지만 팬데믹 동안 캐나다는 값싸고 질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 없이는 캐나다인들, 특히 여성들, 의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것 배웠다고 밝히면서 아이 돌봄 인프라 개선이 페미니스트 리커버리(feminist recovery)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CBC, 2021.7.8).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이미 일 10달러 데이케어 파일럿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선거에서도 이 파일럿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확산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 또한 8일 연방정부와 협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팬데믹이 아이 돌봄의 경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CBC, 2021.07.08.).

이어 2021년 7월 13일에는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가 두 번째로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했다. 이안 란킨(Iain Rankin) 노바스코시아 주지사는 7월 13일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905 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아 데이케어 비용을 10달러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노바스코시아에는 아동들을 위한 9,500개의 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의 아이 돌봄 영역에서 종사자들의 수급 부족 문제와 민간

데이케어와 공적 데이케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노바스코시아주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한하여 500달러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임금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 또한 발표하였다(The Coast, 2021.07.13).

연방정부의 이번 정책안에 대해 매년 캐나다 전역의 데이케어를 분석해 온 오타와의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 대안 센터(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이번 1980년대 이래 캐나다 정부의 가장 야심차고 포괄적 아이 돌봄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CBC, 2021.07.08.). 현재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정부는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할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센터는 만약 뉴브런즈윅주가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서명할 경우, 2022년까지 뉴브런즈윅에서 영아를 데이케어에 보내는 부모들은 연간 5,000 캐나다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 10달러 데이케어가 현실화될 경우 뉴브런즈윅의 부모들은 연간 약 7,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유치원 아동의 경우 현재 뉴브런즈윅에서는 아동 한 명당 연간 약 8,300달러가 드는데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2026년에는 이 비용을 연간 5,700달러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에 한편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주정부 선거가 올 가을로 다가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가 선거 결과에 따라 어려워질 수 도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선거 직전에 인기 물이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이미 팬데믹 동안 희생이 너무 컸는데 정부로부터 도움이 제때 오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캐나다의 여러 주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들을 보편적인 10달러 데이케어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확실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는 비판이 있다(The Coast, 2021.07.13).